

日帝末期 慶南地域 國內勞務動員의 現況과 實態

チョンソンヒョン

全盛賢

(東亜大学校非常勤講師)

1. 머리말
2. 경남지역 기초자료의 분석과 노무동원현황
3. 경남지역 노무동원 작업장과 노무실태
4.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제국주의 및 식민지배의 실체와 일제말기 조선 사회 및 조선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고찰하기 위해서 일제에 의해 추진되고 진행된 ‘강제동원’에 대한 조사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문제이며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일제에 의해 진행된 ‘강제동원’은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진행되었다. 일제는 전쟁으로 야기된 인적, 물적 부족을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선이 형성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은 전선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지형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후방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지를 위한 인적, 물적, 정신적 동원을 위해 각종 관계법령과 관련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법령과 단체를 토대로 조선인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동원’에 들어갔다. 일제에 의해 진행된 인적 동원은 크게 ‘노무동원’, ‘병력동원’(군인, 군속), ‘성동원’(일본군위안부)으로 나눠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인적 동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이 세 분야를 구분하든지 구분하지 않든지 모두 이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¹⁾.

지금까지 진행된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한 기억투쟁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연구의 시작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계몽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사례발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이 방면에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²⁾.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징용, 징병, 위안부 등 보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해되는 조선 밖으로의 ‘강제동원’에 집중되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연구풍토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일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러한 조선 밖으로의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연구는 점점 국내연구자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점차 사실적인 실체에 접근해가기 시작하였다⁴⁾. 이러한 노력에 의해 조선 밖으로의 ‘강제동원’의 실체는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연구인 조선 밖으로의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계몽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부분적이지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선 밖으로의 ‘강제동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강제동원의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식민지배정책을 밝히는 데 한정하여 일제의 노동정책, 동원정책,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 등이 압도적이었다⁵⁾. 물론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노무동원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⁶⁾. 그러나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국내 지역단위에서 진행된 ‘강제동원’의 실체는 여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체에 대한 접근과 연구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선 내 ‘강제동원’, 즉 국내노무동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말기 조선 내에서 이루어진 노무동원은 일제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누적 수이기 하지만 6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숫자가 조선 밖으로의 동원인 약 85만 명보다 압도적이었다⁷⁾. 물론 이것은 전후 일본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이고 이후 진행된 각종 조사에 의해 조선 밖으로의 동원을 20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 내에서 이루어진 노무동원이 압도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후방의 안정과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 내 노무동원에 적극적이었다. 총독부는 조선 내 노무동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이 법령에 기초하여 ‘관알선’과 ‘근로보국대’의 조직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동원’하였다. 총독부에 의해 동원된 노동력은 전쟁관련 시설물의 조성 및 함께 광업, 교통운수업, 토목건축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조선 내에서 이루어진 노무동원은 조선 전 지역에서 모두 이루어졌지만 특히 전통적인 농업지대였던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당대의 부분적인 기술 자료에서부터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줄임)에 접수한 신고 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북선으로, 북선으로”라는 당시의 슬로건이나 위원회 신고 건수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신고자들로 집중되어 있음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삼남지역에 대한 실태연구는 그간의 미진한 국내노무동원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역단위의 사례연구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실태조사 파악하기 힘든 일제말기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을 제한적이나마 위원회에 신고 접수한 사항을 가공한 『경남지역 기초자료』⁸⁾와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⁹⁾의 분석과 현장조사 및 구술조사¹⁰⁾를 토대로 하여 그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慶南地域 基礎資料』의 분석과 노무동원현황

일제시기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일단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현재 파악되는 자료 또한 신문의 경우 1942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신’ 동원의 측면에서 ‘실제’ 동원으로 넘어가는 ‘국민징용령’¹¹⁾ 이후의 국내노무동원에 대한 실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말기 진행된 국내노무동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

면에서의 보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일단 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초자료를 통해 개괄적이거나 살펴보고자 한다¹²⁾. 2006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를 기본으로 작성한 기초자료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동원시기가 1943년에서 1945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국민징용령’ 이후의 시기를 살펴보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어서 개별 노무작업장에 대한 파악과 함께 당시 작업장이 있던 지역의 각종 지역 자료와 노무동원된 생존자들의 구술 및 회고 등을 통한다면 그 개략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회의 기초자료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기초자료는 경남지역의 국내노무동원 전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사망했거나 관련 사실을 가족조차 모르고 있을 경우 전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무동원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생노무동원이나 거주지 인근의 노무동원처럼 일상화되어 있던 노무동원이 거의 빠져있기 때문이다¹³⁾. 이는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서 노무동원이 일상화·보편화되었기에 이를 노무동원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 이 기초자료는 신고한 사실만을 가지고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다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지역 실무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보면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심의결과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관련 자료의 미비가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피해사실의 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사자의 기억을 통한 역사적 사실에의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은 경남지역 국내노무동원의 제한적인 실태를 드러내는 데 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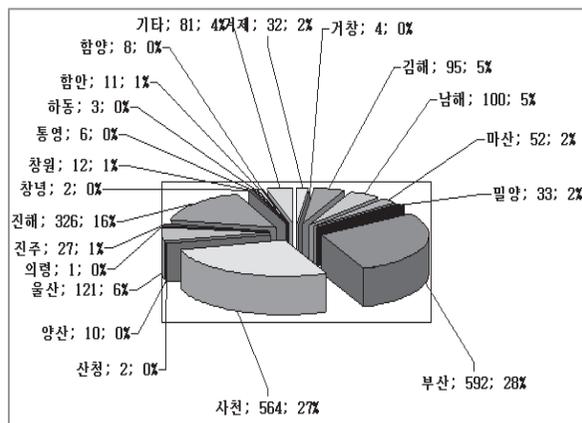


그림 1 경남지역 노무동원지별 현황 (총 2,082 건)

먼저, 노무동원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위원회 기초자료의 국내노무동원은 총 2,090건이다. 그 중 노무작업장이 경남 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8건을 제외하면 모두 2,082건이다. 이를 [그림 1]과 같이 노무동원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산 592건 (28%)과 사천 564건 (27%)을 필두

로 진해 326 건 (16%), 울산 121 건 (6%), 남해 100 건 (5%)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부산의 경우 주로 부두노역·하역작업·매립작업 등 항만시설 또는 운수작업과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분야에 대부분 동원되었다. 사천과 울산의 경우 군용비행장의 시설확충 또는 개보수와 관련된 분야에 동원되었으며, 진해와 남해의 경우는 군부대, 군사·군수시설 등 군과 관련된 분야에 주로 동원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국내노무동원은 주로 태평양전쟁시기 일본군의 후방기지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군사후방기지 또는 군수물자의 보급과 관련된 항만과 비행장, 그리고 군부대에 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2]의 노무작업장별 신고건수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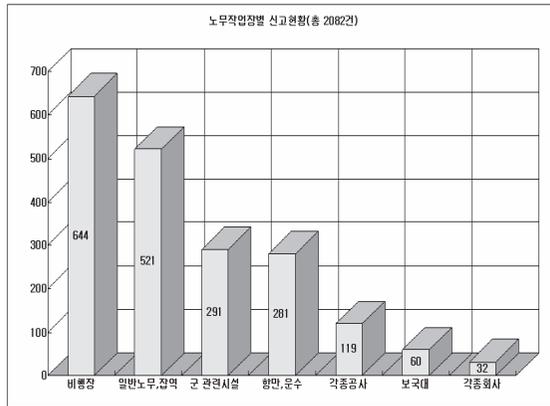


그림 2 경남지역 노무작업장별 현황 (총 2,082 건)

[그림 2]의 노무작업장별 신고건수를 보면, 비행장에 노무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노무 및 잡역, 군 관련시설, 항만·운수, 각종 공사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시설 및 군용시설에 노무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다. 이를 현장별로 세분화하면, 비행장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이 경우도 사천비행장, 김해비행장, 울산 삼산비행장, 진주 초전·도동비행장, 진해비행장, 부산 수영비행장 등 후방기지에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 관련 노무동원은 대단위의 군부대가 진주하고 있던 진해와 남해에서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항만과 운수분야의 노무동원은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 등 항구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일반노무 및 잡역 또한 이러한 후방기지 또는 군수물자보급과 관련된 분야에 동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물자보급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조선방직주식회사를 비롯하여 각종 군수회사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개발 등 경남지역 광산에서의 동원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무동원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교량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그림 2]를 통해 볼 때, 국내노무동원은 주로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기지와 군사적·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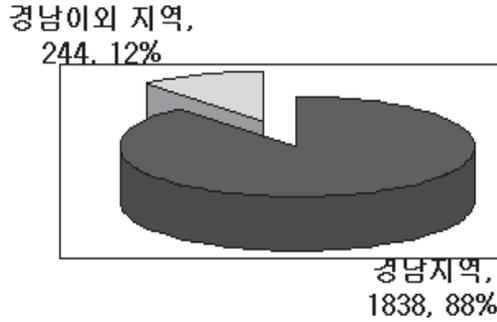


그림 3 노무동원자들의 거주지별 현황 (총 2,082 건)

계속해서, 국내노무동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지역 내외로 나눠보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을 통해 국내노무동원은 주로 이 지역의 조선인들이 노무동원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노무동원된 자들은 주로 진해, 남해 등 군부대에 징용된 사람들로 파악된다. 특히, 진해의 경우 노무동원된 조선인의 약 1/3 정도가 경남이외 지역으로부터 강제동원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경남이외 지역으로부터 동원된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와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력 동원과 이동이 용이했던 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 지역에서 동원된 인원은 비슷한 편이다. 경상북도 도내에서는 상주군과 의성군 그리고 상주시에서 동원된 인원이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조선인이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이들을 당시의 거주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 [그림 4]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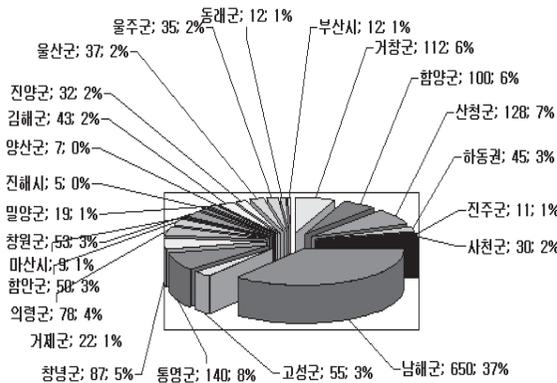


그림 4 노무동원된 경남지역 조선인의 거주지별 현황 (총 1,838 건)

[그림 4]를 통해 볼 때 경남지역 조선인들은 경남 동부지역인 남해군, 통영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의령군의 순으로 노무동원이 되었다. 그 외 지역은 낮은 수준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이를 통해 경남지역 노무동원이 도시지역과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와 산간지역의 조선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해군의 경우 전체의 1/3 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통영군도 또한 노무동원된 조선인들은 도시지역의 거주민들이 주축이었다. 이미 위원회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지만 이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조선인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나간 상태에서 남은 유휴 노동력은 도시와 산간 지역이었으며, 일제는 이 지역의 조선인까지도 동원하여 노무동원에 이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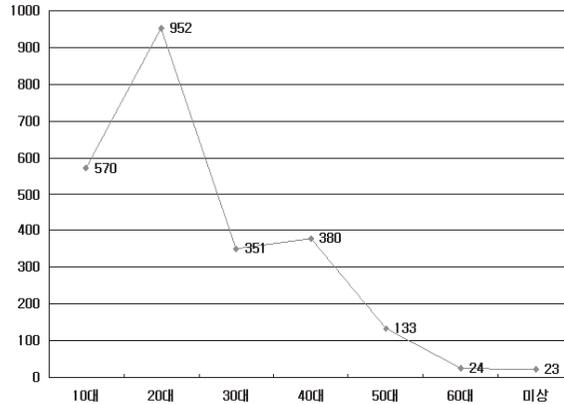


그림 5 경남지역 노무동원자의 연령대별 현황 (총 2,082 건)

계속해서, 노무동원된 신고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당시 노무동원이 어느 연령대에 집중되었는지를 통해 어떤 노동력을 주로 일제가 이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는 노무동원자의 연령대별 분포도이다. 동원된 사람들은 최고 67세로부터 최저 9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동원되고 있다. 이는 일제가 1941년 국민근로보국대의 연령을 14세부터 40세로 정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일제의 강제동원이 무원칙적일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연령대를 중심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이며 그 다음이 10대 그리고 40대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6세에서 21세 (총 683명, 32.8%)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노무동원은 징병과 징용으로 들어가는 세대인 10대 후반을 중심으로 국내노무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징병과 징용은 국내외 노무동원을 막론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노무동원이 주로 언제 집중되었는지 그리고 노무동원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표 4]는 국내노무동원 신고건수를 통해 동원연도와 동원기간을 통계 처리한 것이다.

[표 4] 국내노무동원의 동원연도 및 동원기간

동원연도	동원기간			연도별 건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1938년 이전	1	1	38	40
1938년 - 1942년	4	27	351	382
1943년	43	132	282	457
1944년	215	422	1	638
1945년	348			348
합계	611 (33%)	582 (31%)	672 (36%)	1,865

[표 4] 와 같이 집중적으로 동원된 시기는 1943년 이후, 특히 1944년과 194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943년 이전 시기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 건설과 제방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강제동원되어 군사기지와 군수시설에서 작업을 하였다. 국민총동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14세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든 동원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1944년과 1945년에 집중적으로 노동력 징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동원되다가 이 시기 상시적으로 노동력 수탈이 이루어졌음을 당시의 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원연도와 동원기간이 파악되는 것은 현재 총 1,865 건이다. 동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11 건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동원한 경우는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582 건이다. 2년 이상 장기간 동원된 경우는 전체의 36%로 672 건이다. 이를 통해 경남지역의 국내노무동원이 1년 이상 장기간 동원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피해자의 신고 건수를 토대로 가공된 자료이기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일제말기 일상적 동원은 신고자들의 머리 속에 노무동원으로 각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와 보상’을 매개로 하는 위원회의 피해자 신고 접수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 노무동원이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상적 동원과 관련된 1년 미만의 노무동원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일제말기가 되면 일상적 동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노무동원도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1944년 이후로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여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징발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고통 역시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였다.

3. 경남지역 노무동원 작업장과 노무실태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경남지역 노무동원 작업장은 대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비행장에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다음으로 군 관련 노무동원으로 대단위의 군부대가 진주하고 있던 진해와 남해에서 동원된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어서 항만과 운수분야의 노무동원이 많았는데, 이는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 등 항구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군수물자보급이 많았는데, 이는 부산의 朝鮮

紡織株式會社를 비롯하여 각종 군수회사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개발 등 경남지역 광산이 주축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무동원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교량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 동원실태를 살펴보자.

1) 군용비행장 건설현장의 동원실태

경남지역 비행장 건설은 1928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의도 비행장과 함께 화물 및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1928년 울산비행장이 임시 개장하였고 1931년에 정식으로 비행기가 취항했다. 1936년에는 운영난에 봉착하자 잠시 대구비행장에 통합되었다가 1941년 다시 중일전쟁을 위한 군용비행장으로 개조되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또 다른 군용비행장이 경남지역의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 사천비행장, 수영비행장이 군용비행장으로 개설되었으며 진해에도 해군비행장이 설치되는가 하면 전쟁 막바지에는 밀양의 상남비행장과 진주의 초동·도동비행장이 설치되기 위해 대단위의 노무동원을 추진했다. 이처럼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로 비행장 건설이 일제에 의해 추진되자 징병으로 전쟁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징용으로 동원하여 비행장 건설에 투입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비행장 건설은 일반적인 노무동원이 아니라 징용으로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의 연령대는 10대 후반이 주축이었다. 그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동원인원을 기록했던 사천비행장을 사례로 노무동원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자.

사천군용비행장은 일찍이 선진항과 연계하여 군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속에 기획되었다가 실현되지는 못했다¹⁴⁾. 마침,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후방전초기지로 1940년부터 사천평야에 군용비행장을 건설하여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군 산하에 항공기지부대와 비행장을 수비하는 지상부대가 주둔하게 하였다¹⁵⁾.

사천군용비행장은 특히 1941년부터 본격화된 국민근로보국대를 통해 대대적인 비행장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사천과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강제동원하여 건설하였다. 그렇기에 인근의 곤양면민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노력의 대가인 임금은커녕 식사, 의복, 제반 의약품도 없이 삼엄한 감시 속에 살벌한 구타와 체벌의 고통을 당하면서 공사노역에 종사” 했다고 한다¹⁶⁾. 이후 동원범위가 넓어져 경남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양하게 동원되었는데 가장 많이 동원된 지역이 인근의 남해군이였다.

동원된 대부분의 노무자들은 구장이나 면서기의 지시에 따라 한 면에서 20명 정도 함께 강제동원되었다. 동원될 당시의 나이는 대부분 10대 후반이었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일제말기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되었다. 한 구술증언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신체검사에 갑종판정을 받아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면장이 모친과 조카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을 사천비행장 공사에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같은 ‘함바’에 기숙하며 작업에 참가하였다. 작업시간은 대체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였으며 대부분은 흙 고르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군용비행장이었기에 작업장의 감독은 헌병들이었으며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⁷⁾.

한편, 사천군용비행장 인근에는 일본군이 기지를 중심한 주변 4~5km 이내의 도로변 각 요소에다가 콘크리트조의 아치형 엄폐호 수십 개를 축조하여 전투용 항공기의 대피는 물론 각종 군수물자를 저장해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의 사천기지는 연합군에 의해 공중폭격을 당할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태

평양을 석권하고 일본의 沖繩을 휩쓴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이나 경우에 따라 최후의 상륙목표지점이 될 수도 있었다. 매마침 1945년 해방 무렵부터 미군 함재기의 내습이 잦아졌고 한 날은 미군비행기 3기가 사천군용비행장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 비행장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 중에 사망자도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뿔뿔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¹⁸⁾. 한 노무동원자에 의하면 자신의 집이 남해군이었기 때문에 진교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¹⁹⁾. 이 사건 이후 다시 일제는 강제동원으로 비행장 건설을 지속시켰으나 결국 해방을 맞이하여 비행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현재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사천군용비행장은 사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장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유적은 예수마을에 있는 엄폐호 2기이다. 이 시설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엄폐호이다. 입구의 높이는 4.5m, 건평은 50평 규모의 아치형이며, 1940년대 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인근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여 사천군용비행장을 닦으면서 이곳에다 유류와 탄약 등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논 가장자리에 있는 1개와 주민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1개가 남아있다. 이 외에도 사천교 위 반룡산 밑자락에 2개가 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²⁰⁾.



2) 항만 건설현장 및 하역장의 동원실태

항만 건설 및 하역노무동원과 관련해서는 경남지역의 항구도시 대부분에서 강제동원이 진행되었다. 특히 군사도시인 진해는 물론 조선의 대표적인 항구인 부산을 위시하여 마산 등은 더욱 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 발발과 함께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부산의 경우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 하에 항만의 개발과 이용이 일본군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대표적인 곳으로 赤崎灣을 들 수 있다²¹⁾

적기만의 매립은 원래 釜山鎮埋築會社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받았던 것인데 1930년 당시 남항매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조선의 매축왕’ 池田佐忠이 적기만 매립도 계획하고 1931년 부산진매축회사로부터 약 10만 6,000평의 매립권을 양도받아 1934년 4월부터 범일정으로부터 매립에 착수하여 1944년 12월까지 약 10년 9개월간 3차에 걸쳐 매립을 진행했다²²⁾. 1942년에는 적기부두를 연간 60만 톤의 물동량을 가진 부산의 보조항으로 만들려는 池田와 東洋拓殖株式會社의 계획에 조선군의 특별한 요청까지 더해져 “유사시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이 개발되었다²³⁾. 이 때문에 적기만은 실제 ‘淸’ 부대라는 육군 선박수송부대가 주둔하여 군수품을 취급하였다²⁴⁾.

일제말기 赤崎灣에 동원된 사람들은 주로 부산지역은 물론 경남 의령군, 산청군, 진주시 등에서 차출되어 고향 마을로부터 도보로 인근의 철도역에 모여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이들의 연령은 기초자료에 의하면 50대에서 10대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징용된 사람들이었다.

기초자료를 통해 보면 이들은 다양한 노역에 종사했다. 1944년 12월까지 매립공사가 진행되었기 때

문에 항만매립과 부수적인 매립지 정비작업에 동원된 사람도 존재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매립된 지역의 터를 닦는다든지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사에 동원된다든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임항철도건설에 종사한다든지 했으며, 어느 정도 기술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에도 종사했다. 뿐만 아니라 적기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품을 취급하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방공호 건설은 물론 군수품을 적재하기 위한 군수기지 확장공사에도 종사하였다. 또한 군부대에서도 각종 작업과 하역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군부대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군수물자의 하역 및 운반 작업을 위주로 했다. 이때 운반한 물자는 군량미로 이용된 콩이나 곡류 등을 비롯하여 목재 등 다양한 군수물자들을 운반했다. 더불어 무기, 화약 등의 수송을 담당한 동원자도 있었다. 나아가 적기만 매립은 공업으로도 계획되었기 때문에 1차 매립 이후 각종 유류탱크는 물론 東洋拓殖株式會社,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등 국책회사를 비롯하여 三井物産株式會社, 日本鑛業株式會社 등 유력 기업, 회사, 공장 등 30여 개가 진출하였고²⁵⁾ 일제말기 대부분 군수공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강제동원된 이들은 이러한 군수공장에서 노역했다.

동원된 이들의 노동실태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노무에 종사해야 했으며 휴일은 없었다고 한다. 외부와의 서신 교환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숙소는 임시 거처 또는 창고를 개조한 곳에서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이불 하나만 덮고 생활했다. 식사는 주먹밥이 다였으며 연합군의 공습이 진행되면 노무자들은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한다²⁶⁾. 해방 이후 적기만은 귀환동포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이용되었으며 한국전쟁시기에는 피난민들의 수용소로 이용되어 7만 명의 피난민을 수용했다²⁷⁾.

3) 각종 공사현장의 동원실태

일제말기 각종 공사 현장에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다. 제한적이지만 기초자료를 통해 보면, 경남 각 지역의 도로·철도·터널공사를 중심으로 저수지·수도·교량·제방·배관공사 등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사가 대부분 강제동원을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일제시기 초부터 부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제말기가 되면 군용도로 등 전쟁에 필요한 도로·터널공사에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구제사업 등으로 건설했던 철도 특히 동해선 철도 건설을 징용을 통한 강제동원으로 건설하고자 했음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진해와 창원간 도로개통을 위한 터널공사를 사례로 그 동원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진해지역에 현대적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설된 것은 1910년대의 일이다. 중평 한들의 포구나루가 있던 중앙지를 중심으로 8각형의 방사선 형태로 도로가 개설되었다. 1등도로는 도로의 폭이 20간(약 36m), 2등도로는 15간(약 27m), 3등도로는 10간(약 18m)으로 하여 도로변의 건물은 반드시 기와집을 짓게 하고, 1등도로의 길가로는 단층건물을 허가하지 않았다. 간선도로는 모두 1등 도로로 하였으며 경화동은 격자로 하였다. 시외의 도로는 진해에서 창원간은 장복산맥의 중턱을 지나 안민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1912년에 개설되고, 부산간은 1914년에 웅동까지 수관도로를 개설하고, 자동차도로 개설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였다²⁸⁾.

일제는 1942년에 안민고개로 우회를 하여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마야령 아래에 마진터널을 뚫기로 하고 착공하였다. 마진터널은 마산과 진해 쪽 양쪽에서 굴파기에 들어가 가운데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작업장은 마산 쪽과 진해 쪽에 각각 마련되어 있었고 양쪽은 각각 다

른 지역의 조선인들이 동원되어 작업을 했다고 한다.

당시 진해지역의 노무동원도 경남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진해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군 관련시설, 진해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다. 그런 까닭에 마진터널을 뚫는 작업은 진해지역이 아닌 진해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의 조선인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통영의 사랑도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중반이었고 학교선생님이 인솔한 것으로 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마을에 십 수 명씩, 수백 명이 모여 배를 타고 진해 마진터널 공사장에 동원되었다.

터널공사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터널 밑 ‘함바’ 라고 하는 숙소에서 4~50 명씩 기거하면서 터널 공사에 투입되었다. 노동환경은 열악하여 노동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었으며 식사는 거의 강냉이가 전부여서 집에서 보내준 음식이 있으면 그걸로 연명했다고 한다. 마진터널 공사는 일본 민간인 감독관이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봐서 민간인 토목회사가 터널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산과 진해 쪽에서 각각 이루어진 공사는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다닐 정도의 터널을 완성하는데 그쳤다²⁹⁾.

마진터널은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될 때까지 완공은 보지 못했다. 1949년에 다시 착공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중단되었다. 휴전 후 진해에 市政이 세워진 뒤, 다시 시공을 계속하여 1957년 1월 18일에 준공을 하고 개통을 했다. 마진터널의 높이는 4.5m, 길이는 372m, 폭은 6.5m로 2차선 도로로 터널의 양식은 반원형 아치형 터널로 만들어졌다. 현재의 터널은 내부 좌우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마진터널은 가운데 조명이 설치되었다. 터널의 내부 벽면은 콘크리트로 마감한 벽체 그대로이며, 가로 판재 모양의 거푸집 형태가 그대로 보인다. 일부 누수에 의해 군데군데 균열이 가 있었고, 보수한 흔적도 보인다. 현재 1985년도와 1998년도에 각각 완공된 장북터널(4차선)에 의해 현 도로는 이용되고 있지 않다.



4) 회사·광산 노무현장의 동원실태

일제말기 강제동원 중 특히 군수물자와 관련된 회사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앞에서 살펴본 적기만의 각종 군수회사는 물론이고 기존의 방적, 방직회사를 비롯하여 금속, 화학공장 등에서도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 대부분 군수품 제조 및 운반과 관련된 회사, 공장들이었다. 또한 전쟁물자와 관련하여 자원약탈의 광산개발도 적극적으로 동원된 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경남지역에도 1930년대 이미 개발된 광산에서 일제말기가 되면 강제동원이 추진되었다.

기장군 일광면 원리 104번지에 해방이후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 내 5대 구리광에 포함되는 일광광산이 소재하였다³⁰⁾. 일광광산은 일본의 대표적 기업이 住友鑛業株式會社の 일광탄광으로 1930년대부터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住友企業은 1885년 九州의 庄司炭礦을 사들이면서 탄광업에 뛰어들어

1924년에는 北海道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坂炭鑛의 경영에 참여하며 1925년 住友坂炭鑛株式會社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27년에는 住友別子鑛山株式會社를 설립하였으며, 1928년에는 住友九州炭鑛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1930년에는 住友坂炭鑛株式會社와 住友九州炭鑛株式會社를 병합하여 住友炭鑛株式會社를 설립하였고, 1937년에는 住友炭鑛株式會社와 住友別子鑛山株式會社를 병합하여 住友鑛業株式會社를 설립하고 해방이후까지 운영하였다³¹⁾. 이처럼 주로 九州와 北海道의 탄광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住友가 1930년대 말에는 조선에서도 탄광을 개발하고 채광활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일제시기 이 광산에서 일을 한 조선인에 따르면 1944년 4월 1일 일광면 소재의 ‘住友鑛業株式會社 日光炭鑛 選鑛場’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징용되었다. 또한 그날 이후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구리 채광에 동원되어 아주 고되게 일했다. 더불어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기장면 장안읍의 청년훈련소로 가서 군사훈련도 받았다. 그런 와중에 이곳에서의 작업 도중에 발가락이 절단되어 현재까지 장애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³²⁾.



다음으로 함안 소화광산에 대해 살펴보자. 일제 강점기 수탈행위는 마산 진전면 일대의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다. 둔덕, 옥방, 골옥방, 금암마을 등의 여항산지 일대, 오서리 일대 창포뿔산 등 광석이 있을 만한 곳은 이 잡듯이 찾아 파헤쳐 제련하여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곳은 둔덕마을 주위 여항산지였는데 威安鑛業株式會社가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은과 금을 채광하기 위하여 3,000여 명의 광부를 고용하고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각 도에서 징발한 강제징용까지 동원하여 100개 가까운 굴을 뚫어 산을 벌집처럼 훼손하였다.

威安鑛業株式會社の 모회사는 昭和鑛山株式會社였다. 이 회사는 1936년 12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광업 경영 및 그것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 회사의 대표자는 일본인 林岩太郎, 회사의 중역은 일본인 千宗建, 河野年 등으로 자본금 500,000 원으로 시작하였다. 그 본점은 함경북도 경흥군에 소재를 두고 있었다³³⁾. 1930년대 후반 소화광산에서는 광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광업주가 인부들을 총, 장검으로 위협하며 휘둘러 10여 명이 다쳤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³⁴⁾.

4. 맺음말

일제말기 노무동원의 실태는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기초 자료를 통해 개략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첫째, 경남지역은 남한지역만을 놓고 볼 때 전라, 충청, 경북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강제동원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남지역의 경우 국내노무동원율이 다른 강제동원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내노무동원율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남지역이 지니고 있는 군사적, 지리적 특징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남지역은 부산, 사천, 진해, 울산, 남해 등 주로 태평양전쟁시기 일본군의 후방기지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군사후방기지 또는 군수물자의 보급과 관련된 항만과 비행장, 그리고 군부대에 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경남지역은 징용에 의해 국내노무동원도 주로 10대 후반이 주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동원된 시기는 1943년 이후, 특히 1944년과 194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동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3%,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31%, 2년 이상 장기간 동원된 경우가 36%로 대체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동원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자료의 한계는 명확하다. 일상적 동원인 1년 미만의 동원이 신고건수에서 대대적으로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결과는 일제말기 장기적 동원의 수가 확대되고 있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를 것이다.

한편, 경남지역 노무동원 작업장은 대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비행장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비행장 다음으로 군 관련 노무동원이 많은데 군 병참기지였던 부산, 마산 등을 비롯하여 군부대가 있었던 진해, 남해 등지에 주로 동원되었다. 계속해서, 군수물자보급과 관련된 회사동원이 많았는데, 이는 부산의 조선방직회사를 비롯하여 각종 군수회사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개발 등 경남지역 광산이 주축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무동원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교량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이상의 개략적인 경남지역의 국내노무동원 현황과 실태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실 발굴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시보』, 『서울신문』
 정부기록보존소, 『조선총독부 - 노무』 (총 19 권), 1938~1945
 조선노무협회, 『조선노무』, 1941~1945(영인본: 녹음서방, 총 4 권, 2000)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3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上. 下, 青木書店, 1973
 신정식, 『일제의 조선인 강제수탈사』, 비봉출판사, 1982
 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1~5卷)』, 三一書房, 1983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 2, 일월서각, 1988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이종학, 『한국군사사서설』, 서라벌군사연구소, 1990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松本正徳, 『日本勞務管理史』, 中央大學出版部, 1997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農業生活誌 1939~1945』, 社會評論社, 1998
 樋口雄一, 『전시하조선인노무동원기초자료집』 총 5 권, 綠陰書房, 2000
 강용권, 『끌려간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해와달, 2001
 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총 100 권, 한국학술정보(주), 2001
 박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신서원, 2001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강제연행의 역사 - 자료연구』, 경인문화사, 2003
 金英達,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2003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부산광역시 실무위원회,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 2005~2007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 조선내에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강경구, 「전시하 일제의 농촌 노동력 수탈정책」, 『日帝末期 과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강경숙, 서현주, 「일제 말기 노동력 수탈 정책」,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박건홍, 「일제말기 조선에서의 전시 노동력 동원」,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1
 신주백, 「일제의 교육정책과 학생의 근로동원(1943~1945)」, 『역사교육』 78, 2001
 한혜인, 「조선인강제연행에서의 강제성의 한 단면」, 『일본어문학』 10, 2001
 하중문, 「일본의 노동력 동원정책」,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1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기 노동자의 경험세계」, 『역사연구』 11, 2002
 정혜경, 「일제 말 전시동원체제관련 자료 연구 - 국내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해방전후사료연구』, 선인, 2002
 정혜경, 「일제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2002
 안자코 유카,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14, 2003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사림』 24, 2005
 김윤미, 「근로보국대 제도의 수립과 운용(1938~1941)」,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민,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 전북지역의 사례」,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

注

- 1)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강제동원은 몰타 등 기타 동원을 제외한 인적 동원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임을 밝혀둔다.
- 2)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 3) 노동력동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선 밖으로의 동원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성동원에 관한 연구는 다른 동원보다 연구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앞의 책, 2005, 219~346, 483~512 쪽).
- 4) 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5;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 5) 박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庵濬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2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이승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경제』, 선인, 2010.
- 6)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 조선내에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사림』 24, 2005;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제주도 주민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7, 2007; 김진영, 「일제 말 강화군에 대한 인력동원의 실태와 추이(1938-45)」, 경희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8; 이병례,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인천학연구』 10, 2009;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 12, 2009; 김민영,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 - 전북지역의 사례」, 『한일민족문제연구』 16, 2009.
- 7) 김민영,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인원 추정」,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8)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경남지역 기초자료』, 2006.
- 9)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는 위원회에 신고된 신고자의 피해사실 및 관련 증빙자료는 물론 지역단위에서 심의한 결과까지 첨부하고 있어 노동동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부산광역시 실무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였다.
- 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용역발주에 의해 필자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신은제, 이광욱, 안승광이 2007년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 11) 정혜경, 「국민징용령과 조선인 인력동원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2008.
- 12) 본 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까지 신고 접수한 사항을 정리한 기초자료이다.
- 13) 학생노동동원과 관련된 사실은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산일보』 1938.3.18(석 3-1), 「총후의 임무로 눈물겨운 노력」; 3.23(석 2-8), 「애국심의 결정」; 4.10(석 2-8), 「폐물이용과 용비절약의 헌금」; 『부산일보』 1939.6.16(조 3-10), 「하휴를 이용한 학생의 근로작업」; 1939.6.16(석 2-5), 「경남중등학교 생도 총동원의 보국대」; 『부산일보』 1939.8.3(석 3-4), 「땀과 먼지투성이의 소중한 봉사작업」; 『부산일보』 1939.8.4(석 3-4), 「炎天下流汗作業 馬山高女校의 勤勞報國隊, 感激의 生活 제 5학년 守分玲子」; 『부산일보』 1939.8.5(석 3-5), 「炎天下流汗作業 馬山高女校의 勤勞報國隊(中), 勤勞奉仕의 感想 제 3학년 吉川幸枝」; 『부산일보』 1939.8.6(석 6-2), 「炎天下流汗作業 馬山高女校의 勤勞報國隊(三), 汗愛日記 安東トヨ子」; 『부산일보』 1939.8.8(석 6-3), 「炎天下流汗作業 馬山高女校의 勤勞報國隊(四), 勞動의 歡喜 5년 岡野はるゑ」; 『부산일보』 1940.12.15(석 2-10), 「유가족의 상점에서 생도의 근로봉사」; 『부산일보』 1940.12.27(석 2-10), 「부산직업고생도의 봉사」). 또한 일반노동동원과 관련된 사실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당시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산일보』 1939.8.1(석 3-5); 8.4(석 3-6); 8.12(석 7-9); 8.22(석 3-7); 9.13(석 3-5); 9.16(석 3-2); 9.24(석 2-1); 11.11(석 6-5); 『부산일보』 1940.2.15(석 3-4); 2.16(석 3-5); 4.19(석 3-2); 8.3(석 3-2); 8.6(석 2-4); 8.17(석 3-10); 『부산일보』 1941.4.10(석 3-10); 5.14(석 3-2); 5.20(석 3-3); 5.25(석 3-5); 8.19(석 2-1); 『부산일보』 1942.5.8.(석 3)).
- 14) 용현조기회, 『용현면향토사』, 1999.
- 15) 사천시사편찬위원회, 『사천시지』, 2003.
- 16) 곤양향토사편찬위원회, 『곤양향토지』, 2004.
- 17) 「이재술 증언」(2007년 9월 19일 면담)
- 18) 「강신윤. 유갑정 증언」(2007년 9월 18, 19일 통화)
- 19) 부산광역시 실무위원회, 「접수번호: 부산 사상구 -352」,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제 7-7 권)』, 2007.
- 20) 정동면지편찬위원회, 『정동면지』, 1996.
- 21) 적기만은 지금의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은 아카사키라고 불렀다(朴元杓, 『부산변천기』, 1970, 108 쪽).
- 22) 池田國司, 『池田佐忠 事業と人生』, 1999, 152~157 쪽.
- 23) 「朝參密 第 917 號(조선군참모장 高橋坦→조선총독부재무국장 水田直昌)」, 1942
- 24) 노기영, 「일제말 부산 적기만의 매립과 임항철도 건설사업」, 『항도부산』 22, 2006, 322 쪽.
- 25) 池田國司, 앞의 책, 157 쪽.
- 26) 부산광역시 실무위원회, 「접수번호: 부산 수영구 -212」,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제 4 권)』, 2006.
- 27) 노기영, 앞의 논문, 331 쪽.
- 28) 진해시사편찬위원회, 『진해시사』, 1991.
- 29) 「탁치주 증언」(2007년 9월 20일 통화)
- 30) 『서울신문』 1947.4.30, 「군정청 재무부, 경제부흥자금 2천만원 용자 승인」
- 31)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한혜인·이규수·요시자와 가요코(吉澤佳世子)·송병권·정성일·하정용,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Ⅱ』, 국사편찬위원회, 2004.
- 32) 부산광역시 실무위원회, 「접수번호: 부산 수영구 -120」,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제 4 권)』, 2006.
- 33)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7.
- 34) 『東亞日報』 1938.11.9(7-1), 「鑛主, 勞働者間衝突 凶器로 人夫殺傷」

【2011년 12월 9일 레フェリーの審査を経て掲載決定】

